

‘주69시간’ 한발 물러선 정부... 제조업 등 60시간 절충안 나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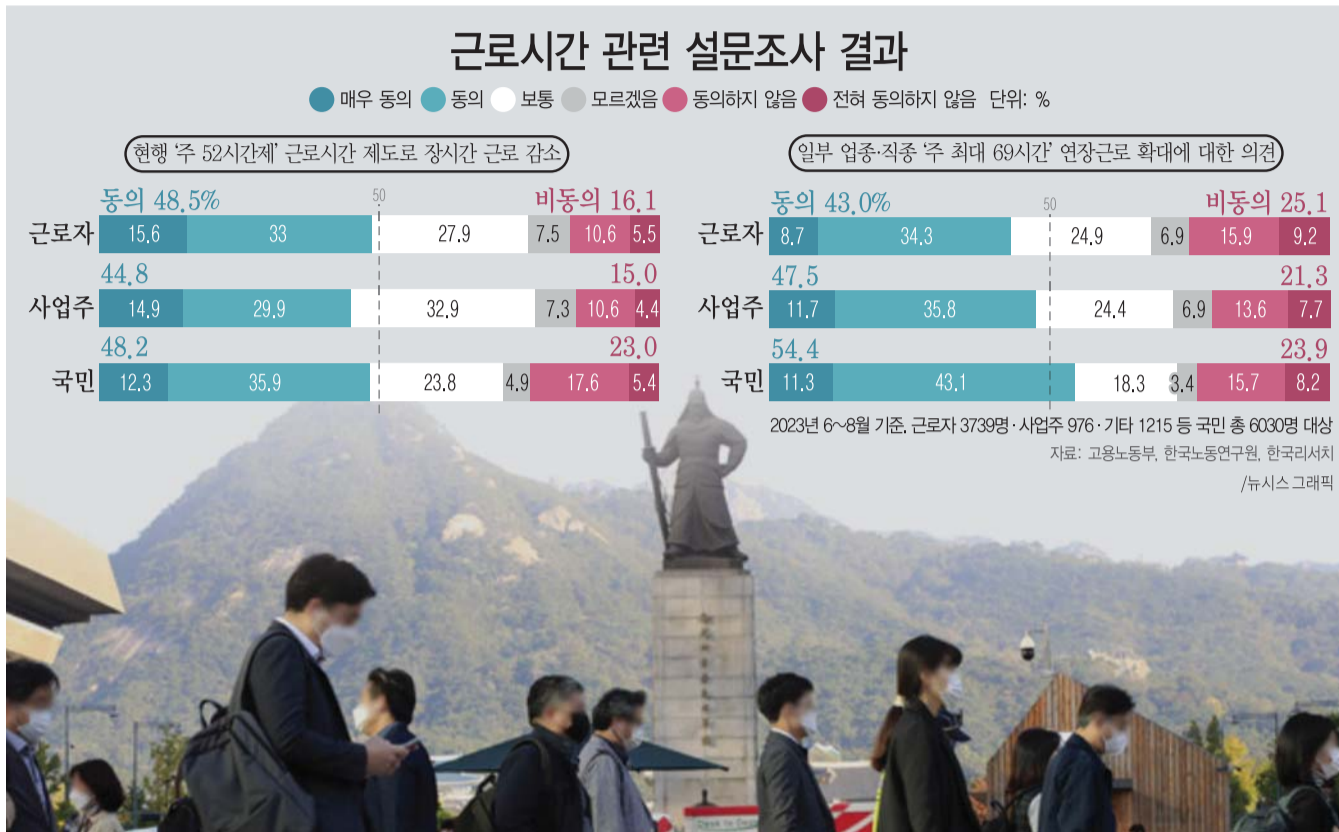
설문조사 바탕 ‘개편방향’ 발표
전 업종 근로시간 연장추진 철회
일부 업종·직종 한해 추가 검토
“세부방안 노사정 대화 통해 구체화”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일종의 ‘사회적 절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업종에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거쳐 관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상한을 ‘60시간 이내’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연장시간 조율 등 타협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단, 향후 노동계·경영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날 개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



제에 대해선 국민 절반가량(48.2%)이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48.5%, 사업주 44.8%, 국민 48.2%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근로자가 16.1%, 사업주 15.0%, 국민 23.0%였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다.

반면 근로자 44.2%와 국민 54.9%는 ‘현 제도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

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물었더니 1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업무량 변동이나 일시적인 인력부족 대처문제 등이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사업시설(32.6%)과 제조업(27.6%)에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업주 비중은 85.5%에 달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각각 29.8%, 26.3%, 29.8%였다. 동의 또는 보통 응답을 한 이들에게만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근로자 62.5%, 사업주 59.3%가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엔 근로자

48.7%, 사업주 38.7%가 동의했다. 이 경우 적절한 범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중에 고르게 했을 때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골랐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다음이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었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63.6%가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직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30%가량이 ‘설치·정비·생산직’을 꼽았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대해선 근로자의 14.1%, 사업주 12.6%만이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사정 대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년 만에 2배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대통령실 “일방 추진 불가... 노사와 충분히 대화할 것”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안타까워
조속한 사회적 대화 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 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000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해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 부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용산이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조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윤대



이도훈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스

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경총 “구체적인 방안 없어 아쉬움”

“3월 발표안보다 못 미치는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13일 정부 발표에 대해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쉬움”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4%만이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발 후퇴했다.

경총은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실태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경직된 제도로 수주를 포기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재용 기자 juk@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격 복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한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제로

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요구하라’고 했다”며 고 밝혔다.

이어 “금일 대통령실이 ‘오랜시간 우리나라 사회적대화를 책임져왔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조속히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는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